

|  | 보 도 자 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         |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유현지 연구원(044-960-0393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         |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044-960-0443)      |
| 보도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즉시 보도 가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“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”**  
 -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 
 국토研, 워킹페이퍼(WP 22-31호) 발간

-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유현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『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』에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체계와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관리 수요의 대응 방안으로서 민간투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.
-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조사는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(이하 기반시설관리법)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중 유지관리 투자액과 관리규모(중대형 기반시설 기준)가 가장 큰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수행
-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(도로, 철도 등)와 세부분류(ex. 도로: 고속도로, 일반도로, 지방도 등)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,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·환경,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.
-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,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(도로, 항만, 수도 등)을 선정
  -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,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, 감독 의무 등을 규정
  - 관리주체는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,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/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

□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,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**유지관리 자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.6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
- 전체 도로 연장의 82%가 지자체 관리시설(특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)이며, 국가 관리시설(고속도로, 일반도로)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,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
-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
□ **민간투자사업**은 민간의 자본·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·운영하는 방식으로 써,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**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**이 될 수 있다.

-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·개선의 한계를 제기,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
-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, 민간의 창의·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
-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,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,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

□ 유현지 연구원은 **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,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, 정부의 감독 제도가 필요**하다고 제언하였다.

-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, 수익성,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, 수익구조(수익원 여부 등)에 따라 BTO,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

-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(보조금 등)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·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
-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·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
-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,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 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